

보호위,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

- 1.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'전체 매출액' 기준 과징금 3% 부과, 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
- 2. 개인정보 형사처벌은 보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해당
- 3. 개인정보 이동권, 금융/공공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
- 4. 보호위가 인정하는 안전한 국가/기관이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(GDPR 국외 이전제도)
- 5. 모든 기업/기관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시 의무대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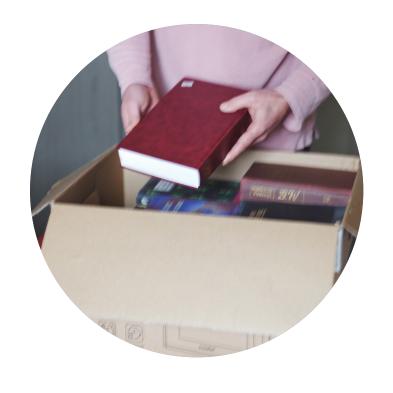
개인정보침해사고시 '전체 매출액' 기준으로 과징금 3% 부과

- · 기존 법령은 '위반행위 관련' 매출액 3% 부과
- · 부과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 - → 전체 기업/기관으로 확대
- · 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 (GDPR: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% 과징금 중 높은 금액 부과)
- ·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



개인정보 형사처벌은 '본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'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

·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형사처벌을 묻지 않음



개인정보 이동권, 금융/공공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

- · 내 개인정보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디까지 이용제공되는지 스스로 결정
- · 기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(신용정보법), 공공분야 데이터 이동권(전자정부법)에서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확산

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거나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경우 중지명령

05 모든 기업/기관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의무대응

분쟁조정시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

PRIVACY REPORT

www.somansa.com